

갈수록 커지는 '민주 돈봉투 의혹'... 지역 정치권 촉각

녹취록 이어 노트까지...국회의원 수십명 실명 거론 검찰 소환 땀 정치적 치명상...차기 총선 변수로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3만여 개에 이르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녹취파일에 이어, 돈 전달 과정이 적힌 노트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과 정치권 인사들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민주당 차기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등 차기 총선 지형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수수사건 관련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와 당시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주거지,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 지역상황실장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3400만원 등 9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 돈 봉투 의혹 공여자들에게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부터 돈 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후

대폰 녹취와 노트에 거론된 수십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돈 봉투 수수 진위 여부를 떠나 검찰 소환 자체로 민심의 의구심을 살 수 있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 주도적으로 돈 봉투를 전달한 일부 의원들만 소환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등 여야 간의 정면대결 구도가 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돈 봉투 사태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대 돈 살포 사건에서도 돈을 줬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만 사법처리된 사례가 있다"며 "하지만, 그 때와 지금은 시대적 분위기도 다르다는 점에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돈 봉투 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점차 흔들리고 있다. 돈 봉투 논란이 터진 지 보름이 지났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진상조사 할 수 있는 권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며 "확인되는 실상에 따라 대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는 논총이 나오고 있다. 또 지도부가 이번 전대 돈 봉투 논란을 계기로 대의원 제도 등에 대한 쇄신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이 정도로 민심의 공감을 얻기는 태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체적인 공천 혁신보다는 '검찰발 물갈이'가 현실화되는 것이냐는 자조 섞인 푸념도 나오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비명계이자 친박계(친이낙연)인 박광온 의원이 비명계 후보들을 제치고 무난하게 당선된 것도 이 같은 당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과, 친문(친 문재인)계의 고민정 최고위원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자리를 잡으면서 친명계 일색이었던 민주당 지도부가 일정 부분 균형을 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과감한 혁신 없이는 민주당이 스스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돈 봉투 사건에 지역 국회의원이 연관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진보 성향의 지역 민심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박광온(맨 왼쪽) 새 원내대표가 다른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 새 원내대표 박광온... 당 쇄신·총선 승리 '과제'

해남 출신...과반 이상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해남 출신 박광온(3선·경기 수원정) 의원이 선출되면서 '당 대표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시끄러운 민주당이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다양한 계파 간 갈등을 봉합하고 차기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 신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후보자들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4명 후보가 경쟁해 당초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박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홍익표(3선)·박범계(3선)·김두관(재선) 의원을 따돌렸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쓴맛을 봤으나 '재수' 끝에 거대 야당의 원내 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 정책에는 사람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기초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독선·독단·독주의 국정운영을 폐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권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겸허하게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국민과 함께 가고 국민과 협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尹 방미, 대국민 사기 외교"

"美 아니라는데 '핵공유' 주장...넷플릭스 투자, 실제 1천만원 늘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간 국빈 방미 성과를 두고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혹평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핵공유 논란'이 이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당일인 26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미국 측은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 공

유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한미 간 온도차가 감지됐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권 수석대변인은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의 궤변에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며 "실제 핵을 가진 미국이 아니라는데 한국이 미국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경제 분야 방미 성과를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윤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향후 4년간 3조3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넷플릭스의 지난해 한국 투자액만 대략 8000억 원으로 4년이면 3조 2000억 원"이라며 "고작 1000억 원 증가한 게 자랑인가"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지방정가 라운지

한빛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반대 결의대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박원종(민주·영광 1) 전남도 의원은 최근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임영민)와 공동으로 한빛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동대책위는 지난 26일 한빛원전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한빛원전 1.2호기는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폐로대상으로 선정되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폐로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도, 최근 제 10차 전

력수급계획에서 주민과의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장가동이 결정됐다"면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 역시 지난 4월 6일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의결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정부와 공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싼
지분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신안동 상업용지, 매매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특, 변경가

문의. 010-3605-5000